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 과 '커리어'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10명 중 6명만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 임현정 기자

관찰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대기업 채용 줄고 불안한 비정규직 늘고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중산층은 줄고 빈곤층은 늘어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초 발표한 '2011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최근 10년 새 빈곤층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지목했다. 작년에도 임시직 근로자는 전체 고용의 19.2%를 차지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2.8%를 크게 웃돌았다. 임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넉넉한 연봉과 수준 높은 수준 복리후생을 쫓아 구직자 대다수가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현실을 탓할 수만도 없는 이유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 과 '커리어' 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취업자 10명 중 6명만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비정규직 내지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한 인턴으로 취업했다. 전체 취업률 또한 기업 규모별로 볼 때 중소기업에 55.2%가 취업했고 이어 중견기업 17%, 대기업 14%, 공기업 10.1%, 외국계 기업 3.6% 등의 순이다.

비정규직 채용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신입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은 더욱 높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채용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업종으로 금융을 꼽을 수 있다. 창구직원을 주로 계

구직자 대다수는 넉넉한 연봉과 수준 높은 복리후생을 쫓아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다. 최근 10년 새 빈곤층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으로 불안정한 일자리가 꼽히는 현실이고 보면 이러한 세태를 탓할 수만도 없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괜찮은' 일자리의 대명사인 대기업의 올해 채용인원은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2012년 취업시장 핵심 화두의 하나로 비정규직 채용 증가를 꼽는다.

약직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운송, 호텔·관광, 공기업·공공기관, 건설 등도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일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용이 호조세를 띄고 있다지만 정규직 입사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대기업·정규직 취업문

'괜찮은' 일자리란 장기간 근무할 수 있고, 기본적인 복지가 보장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맡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꾸리거나 성공할 수 있는 '진로의 발전 과정'이 보이는 일자리를 말한다. 괜찮은 일자리의 대명사는 대기업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올해 채용인원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2012년 취업시장 핵심 화두의 하나로 비정규직 채용 증가를 공통적으로 꼽는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을 이미 확정한 업체는 79.2%이고 이들 기업의 고용 예정 인원은 총 2만5천728명이었다. 지난해보다 2.1%가 줄어든 수치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상장사 1천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 대졸 신입 채용계획' 조사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채용에 나서는 기업과 고용 예정 인원은 각각 65.7%와 3만2천397명으로 이들 기업이 작년에 채용한 인원보다 5.7%가 적다. 조사 대상 기업의 17.8%는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16.5%는 채용할 생각이 아예 없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3.3%가 줄어드는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9.2%와 21.3%로 감소폭이 꽤 크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이에 대해 "올해에도 경제 상황이 썩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보수적인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배경에는 지난해 채용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진행된 데 따른 반동 현상도 있는 것 같다"고 풀이한다.

채용 감소세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괜찮은' 일자리란 장기간 일할 수 있고, 기본적인 복지가 보장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진로 발전의 과정이 내다보이는 일자리를 말한다. 사진 이정훈 기자

다. 석유화학, 기계철강중공업, 유통·무역, 건설 등은 5~10%의 비교적 소폭 감소가 점쳐지지만 금융, 자동차, 제조, 물류·운수, 제약 등은 10~30%의 대폭 감소가 관측된다. 반면 전기·전자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정보통신과 식음료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경제행복지수 하락, 또 하락

수명이 길어지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인 변



고용이 불안하고 사회보장도 열악하니 국민의 경제행복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소득 감소를 낳고, 다시 가게 빛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사진_김연정 기자

화와 맞물려 돌봄서비스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자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이나 영·유아 돌보기를 비롯해 간병, 가사 지원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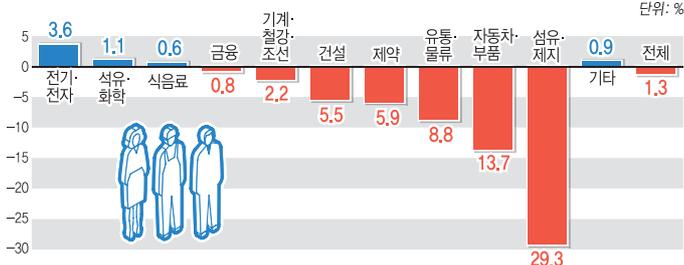
그러나 이들 대다수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민간 간병서비스는 1일 24시간 기준 급여가 5만5천~6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4천320원

의 절반을 조금 넘는 2천500원 안팎이다. 그나마도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일하며 휴일이나 휴가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민간 가사서비스 분야 종사자들 또한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며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이들도 시간당 4천500~7천500원, 사회보험가입률 40~70%로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1월에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 총액은 기간제 근로자가 1만522원으로 가장 많고 일일 근로자 9천548원, 파견근로자 9천177원, 단시간 근로자 7천984원, 용역근로자 7천368원의 순이다. 조사는 작년 6월 전국 3만1천663개 표본 사업체와 소속 근로자 79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다행이라면 그나마 처우가 조금씩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가입률도 일일 근로자는 고용보험 40.1%, 건강보험 13.9%, 국민연금 13.5%에 각각 그쳤고 단시간 근로자는 28.6%, 26.7%,

500대 기업 내년 업종별 채용 예정인원 증감률



자료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그래픽_김예원 인턴기자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일자리를 강조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사진: 이지은 기자

27.7% 등으로 10명 중 3명꼴에도 못 미쳤다. 단, 파견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률이 90%를 웃돌았고 기간제와 용역근로자도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가 2명 중 1명은 상여금을 받았으나 용역·단시간·일일 근로자는 거의 받지 못했다. 퇴직금 역시 파견·용역·기간제 근로자는 70% 이상이 받았지만 단시간·일일 근로자는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고용이 불안하고 사회보장도 열악하니 국민의 경제행복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소득 감소를 낳고, 이것이 다시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벗어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

고용부는 얼마 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하지만 강제나 의무가 아닌 형식적인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사 간 협력과 양보,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이 절실하다. 충청남도가 새해를 맞아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대책’이 좋은 예다. 충남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일당이 아닌 월급을 지급받고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금도 지원받는다. 호봉제 도입, 명절 휴가비 동일 지급, 병가 유급제 적용, 근무경력 인정 등도 가능해졌다. 그 결과 임금이 14.4% 인상되고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소액이나마 월급이 인상되는 효과도 덩어로 얻게 됐다. 2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2012년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라고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조 및 관행을 혁신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정부의 노력이 국민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서지훈 기자 ibuddy@hanmail.net